



기후변화 협상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한 인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

전수 기준으로 세계 2위의 CDM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는 기후변화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해왔다. 2009년 10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세계 언론인 환경포럼에서 자이람 라메시 환경장관은 세계 110여 개국에서 온 중견 언론인 400여명 앞에서 “인도는 12월 코펜하겐 회담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강제하는 어떠한 방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경제 성장엔진을 줄일 기세가 없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상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극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극적인 입장 변화는 중요 개발도상국 이해당사자인 중국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홀로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정문에 인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라메시 환경부 장관의 주도하에 심지어는 선진국의 보상과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감축 목표 설정 등의 원칙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수준의 극적인 형태까지 논의된 바 있으나, 내부적인 반발에 부딪혀 이는 포기하였다.

인도 등 BASIC 그룹, 코펜하겐 기후회담 통해 새로운 리더로 부상

각국의 이기주의로 인해 110여 개국 정상이 모인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미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중국 등 5개국만이 모여 코펜하겐 협정(총회 미 채택, 공식문서로만 인정)을 만들게 되는 반쪽자리도 안 되는 결과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인도에 있어 이번 기후변화 협약은 중요 4개 개발도상국과 미국이 마련한 협정문이 공식문서로 채택되었고, 이 문서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더라도 1월말까지 87개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기후변화 협상의 주도적인 입지를 차지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브라질, 남아공, 인도, 중국 등 중요 4개 개발도상국은 스스로를 BASIC 그룹으로 칭하고, 앞으로 있을 기후변화 협상에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년 1월 24일, 코펜하겐 이후 뉴델리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들 각국의 장관급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코펜하겐 협정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자발적 감축 목표 및 관련 정보를 UNFCCC에 제출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선진국에게 2010년 내 100억 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BASIC 그룹을 결성,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인도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뿐 아니라 협상을 리드하려는 전략으로 수정한 것으로 감지된다.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20~25%에 달하는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2010년 1월 말까지 UNFCCC에 제출된 인도의 최종 감축 목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협정 이전 발표한 인도 정부의 자발적 감축 목표에 의하면 인도는 2020년까지 2005년 기준 GDP 단위당 배출량의 20~25%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인도 정부는 현재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선진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정부가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에 저해되는 자발적 감축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향후의 기후변화가 인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24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다. 주요한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다.

① 인도 기후변화평가 네트워크

(Indian Network for Climate Change Assessment)

120개의 연구기관과 250명의 과학자가 모여 기후변화 평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10년 5월, 11월 2회에 걸쳐 대규모 컨퍼런스 개최

② 히말라야 빙하 모니터링 프로그램

(Himalayan Glaciers Monitoring Program)

히말라야 빙하의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심층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 1단계는 종료되었으며 2단계 모니터링을 개시한 상황으로 히말라야 빙하 상태에 대한 1차 연구 논문 제출 완료

③ 지구온난화 가스 모니터링 위성 발사

2010년 에어로졸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기 위해 마이크로 위성을 발사하고, 2011년 중 지구온난화 가스 연구를 위한 종합 위성을 발사, 지구온난화 연구 분야 일류국가 대열에 합류 목표

④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문가 그룹 발족

총리실 산하 경제계획위원회가 이끄는 저탄소 경제 전문가 그룹을 발족, 2012~2017년 간 실시되는 제12차 경제개발계획에 저탄소 경제 성장 전략 도입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인도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의 한계와 기대

현재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도 안 될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인도의 입장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펜하겐 협정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짊어졌던 인도가 최대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과 이를 위해 다수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는 점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철저히 자발적인 감축 목표로만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 인도 정부가 배수진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넘지 않겠다고 선언한 선진국 1인당 배출량 이하의 배출량은 현재의 배출량을 십 수 배를 초과한다는 점,¹⁾ 자발적 감축 결과 검증은 국내 기관에 의해 국내 절차를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협정에 못 박은 점 등은 인도 정부의 자발적 감축 의지를 불투명하게 하는 한계점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도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재정적인 취약도가 높다는 점에서 실제 이행 능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빈민 비중이 높아 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자국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인도 정부의 경우 경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또한 CDM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저탄소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 이전, 외화 수입 증대, 해외 투자 유입 등의 이익을 누려온 인도 정부가 새로운 협정의 자발적 감축 목표 달성을 경제 성장과 성공적으로 연계시킬 수도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인도 정부는 코펜하겐 협정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의무감축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도록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크게 한다. 향후 인도 정부와 BASIC 그룹의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1) UN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미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19.7톤이지만 중국은 4.62톤, 인도는 1.31톤에 불과함